

당원용 환경 정책 및 공약 해설

2002.11.10.

1. 기존 환경정책의 연장선에서 본 2002년 대선 환경정책의 과제

환경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당의 총체적 입장을 마지막으로 제출했던 것은 청년진보당 시절이었던 2000년 총선에서의 환경정책이다. 당시 우리는 “청년좌파”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기존 주류 질서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근본좌파의 지향을 선거 정책 방향으로 갖고 있었고, 환경정책 역시 그 부분을 반영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을 제출했다.

<2000년 총선 정책 기조>

환경문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한다.- 환경, 민중, 그리고 대안

<2000년 총선 주요 공약>

“환경비용의 민중 전가 반대!! 환경문제의 직접규제 강화!!”

“핵발전 정책 전면 철폐!!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 수립!!”

- 환경비용의 민중전가 반대!! 환경문제의 직접규제 강화
 - 시장 경제적 수단에 의한 간접적 환경규제 정책 철폐
 - 간접세에 의한 환경부담금 폐지
- 핵발전 정책 전면 철폐!!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 수립!!
 - 핵에너지,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수급계획 전면 개편
 - 원자력 연구비용의 전면 삭감,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비용 확대
 - 전원개발특례법 전면 폐지
 - 핵발전소·핵폐기물 영구 처리장 신규건설 전면 중단 / 울산·울진 핵발전소 신규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 기후변화협약의 전면 재검토, 신규 감축안 마련
 - 전력산업 민영화반대

<2000년 총선환경 정책·공약 주요 내용>¹⁾

이렇게 제출된 2000년 총선 환경정책은 시장기능의 강화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각종 흐름들에 대해 반대하고자하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었다. IMF 체제와 DJ 정권 초기 한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던 규제완화조치와 물질약, 전기절약(에너지 절약)을 시장(가격)을 통해 유도하고자 했던 일부 시장주의자들의 논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었던 것이다. 이는 사회전체 문제로 환경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환경문제 해결에만 목매달고 있는 환경주의자들의 입장과 분명히 대비되는 것으로 환경문제 해결과 자본주의 반대라는 두 가지 지향을 함께 천명하고 실천으로 옮기고자하는 첫 시발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1) 환경정책과 정책 해설은 당 홈페이지 자료실 중 문서자료실에 전문이 올려져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총선에서의 환경정책은 “환경비용의 민중전가 반대”, “간접적 환경규제 철폐”, “직접규제 강화”라는 환경운동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택했다. 이러한 방식은 국회의원 선거라는 지역적 한계(국가적 차원의 정책-공약보다는 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보수정치권 중심의 선거의 한계)와 선거 이슈상의 한계(2000년 총선의 메인 이슈가 ‘환경’이라는 한가지 영역의 문제가 되기 힘들었던 한계)로 인해서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기는 했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의미에서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었다.

그 후 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환경문제를 둘러싼 많은 지형 변화가 있었다. 당시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활개치던 극단적 시장주의자들은 - 합리적 자본주의자들이 보아도 문제가 많은 - 그들의 목소리를 줄이고 있다. 그들의 극단적인 주장이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사회에서도 100%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던 것이다. 그에 비해 자본의 환경파괴는 ‘총론’수준의 환경파괴뿐만 아니라, ‘각론’수준의 환경파괴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으며, 이는 최근 환경투쟁의 양상에서 과거와 같은 전국적 투쟁사안은 급격히 감소하고, 지역적 투쟁사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반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환경정책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히 늘어나고 있다.

한편 우리 당의 주체적 상황 역시 많이 바뀌었다. 아직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총론”적인 내용이 - 상당히 -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때의 정책이 “선거운동원 교양자료”가 아닌 다음에야 우리가 언제까지나 “총론”만을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다. 2년여의 세월을 거치면서 당 내외적으로 “총론”이 아니라, “각론”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늘어났고, 더구나 전지역 지구당 창당과 2004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연장선에서 2002년 대선을 바라볼 때 이러한 요구들은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2002년 대선에서의 환경정책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의식과 교착점 속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반자본운동, 사회주의 운동을 처음으로 표방한 정당으로서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공약을 요구받는 기본적인 사안과 한국사회에서 반자본환경운동의 이론적-정책적 실체를 쌓아가는 두 가지 의미들을 정책을 통해 표명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2. 2002년 대선에서의 환경 정책 기초

앞서 언급한 과거 정책과의 연관성을 중심에 놓고 볼 때, 2002년 대선 환경정책은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다. 매우 원론적인 입장만을 제출했던 2000년 총선환경정책이 구체적인 공약도 없고 알 수 없는 행정용어들의 모음이었다면 2002년 대선에서의 환경정책은 “공약모음집”이다.

이 두가지 대비가 매우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겠으나 이러한 과정은 사회주의적 관점, 반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사회를 바라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고민해 나가는 여러 가지 시도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20여년 동안 시민운동진영이 해 놓은 환경운동의 여러 가지 방법론과 관점을 “무차별 수용”도 “무차별 배격”도 아닌 중도적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사회주의적 내용으로 소화하기 위해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실험”들이 필요하다. 그동안 “실천”적인 입장에서 반자본운동을 고민하는 환경운동 동지들이 이와 같은 “실천적 노력”을 해왔다면, 이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유사한 실험이 필요하고, 이 시도는 아직 결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2000년 총선 환경정책에서 선언한 시장주의적 환경문제 해결반대, 반자본주의 환경운동에 대한 기본 입장을 유지하였다면, 한국사회에서의 환경문제를 하나씩 접근해 나가는 시도로 2002년 대선 환경정책을 바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2년 대선 환경정책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조로 서술되었다.

“관점을 넘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접근”
“환경‘오염’과 환경‘파괴’에만 국한되지 않는 생태주의적 정책으로의 문제의식 확산”
“지역자치·지역정책에 대한 발판 마련”

2.1. 정책 기조에 대한 설명

1) “관점을 넘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접근”

2000년 총선 환경정책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접근으로 핵-에너지 공약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는 우리당을 비롯 진보진영이 공히 핵-에너지 문제를 진보진영의 최우선 환경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고, 그것을 진술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핵-에너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선 구체적인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했고, 이는 - 앞서 언급한 것처럼 - “총론” 수준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을 서술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선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관점이라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접근이다. 다르게 말하면, “총론”과 “정책”이라기 보다는 “공약”이다.²⁾ 이는 앞으로 우리 당이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환경문제를 실제적인 지구당의 투쟁과제로 삼기 위해서도 매우 필요로 하는 방향성이다. “원론적 입장”만 있는 것은 운동의 원칙성을 건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함의 반증이고, 실제 투쟁에선 그다지 할 것이 없는 애매한 상황을 연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2년 대선에서의 환경정책은 다양한 환경적 이슈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 - 사회주의적, 좌파적 시각 -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각도로 시도했다. 이미 법률 개정, 정책 추진 등으로 진행 중인 사안들과 정책 역량의 한계로 누락된 부분을 제외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생태주의적, 사회주의적 색채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

2) “환경‘오염’과 환경‘파괴’에만 국한되지 않는 생태주의적 정책으로 문제의식 확산

한국사회에서 환경문제는 아직 이념적 수준은 고사하고 ‘오염’과 ‘파괴’를 막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선 후보의 환경공약이 “대기-수질-폐기물-소음”등 전통적인 환경문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것은 잘 드러난다.³⁾ 이러한 시각은 환경문제를 담당 정부부처(환경부)의 사업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생기는 편향으로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협소한 시야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이에 비해 우리가 그동안 접근한 환경정책들은 핵-에너지 사안을 제외하곤 지나치게 추상적인 것들이었고, 생태주의가 이념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 오히려 전통적인 환경문제인 “대기-수질-폐기물-소음” 등에 대해선 어떠한 입장도 없는 아이러니컬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다.

2) 따라서 정책수단에 대한 언급 -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 보다는 ‘찬성’, ‘반대’ 같은 입장 혹은 ‘***위원회 건설’, ‘*** 특별법 제정’과 같은 결과물에 더 많이 집착하게 된다.

3)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 포장만 환경친화적인 -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공약”도 얼마전까지는 도시개발 항목에 들어가 있었다.

이에 2002년 대선에서의 환경정책은 이 두 가지 기계적인 접근으로 인한 편향을 깨고 생태주의적인 사고들로 국가 전체(혹은 지역)을 바라보는 시도로 접근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환경문제만 다룸으로써 접근하지 못했던 핵·에너지, 지역자치, 민영화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전통적인 환경문제 접근에 소홀했던 우리 당 내부에겐 환경문제를 매우 구체적으로 바라볼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

3) 지역자치·지역정책에 대한 발판 마련

최근 몇 년간 시민운동진영을 중심으로 생태주의와 지역자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이 있었다. 지역의제 21, 지역자치운동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이들 운동은 전통적으로 생태주의적 사고라고 칭해져 왔던 지역분권화-지역자치-자발성추동 이라는 생태주의의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물론 생태주의적 사고의 핵심인 자본주의와 사회체제에 대한 극복의지가 그 속에 얼마나 녹아 있는가라는 점에선 그들의 활동이 재평가되어야 하겠지만, 그들의 활동양태와 방식 등은 많은 교훈을 가져다 준다.

특히 전지역 지구당 건설과 2004년 총선 투쟁을 염두해 두고 있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 지역자치·지역정책에 대한 다양한 접근은 향후 정책적 과제로 반드시 대두되어야 할 사안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2년 대선에서의 환경정책은 향후 지역자치·지역 정책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시발점의 의미를 지닐 것이다. 비록 전체 공약에서 몇 줄 차지하지 않는 작은 내용이지만, 대선 공약을 통한 선포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실천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가도록 한다.

3. 생태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환경 공약

1) 남북 교류 시대에 대비한 환경 문제 대책

(해설)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금강산 개발, 철도 건설, 공단건설 등 환경파괴로 이어질수 있는 각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DMZ를 중심으로 조급씩 기미를 보이고 있는 투기 분위기는 향후 최대규모의 자본의 난개발이 진행될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따라서 남북교류의 급물살을 타고 벌어질 수 있는 각종 환경파괴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한다.

- DMZ 국립공원화
 - DMZ 지역 생태 보존을 위한 남북 의제 설정
 - DMZ 전체를 국립공원으로 지정. 남북 교통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신규개발 금지
 - DMZ의 생태 공원화. - 지뢰제거 후 생태학습장. 건설
- 한반도 환경파괴 저지를 위한 공동 성명 채택
 - 해양, 하천, 산지 등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공동노력 모색.

2) 반환경적·반민중적 국가 정책 재고

(해설) 반환경적·반민중적 국가정책은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이러한 가운데 에너지, 수자원, 민영화 등 그간 수없이 많이 제출되었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제출한다.

- 국가 에너지 정책 재수립
 -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가에너지 정책 전면 재수립

-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 연구사업 지원 /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의무화
- 전력 중 핵 발전 비중 단계적 축소.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 핵폐기장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기존 핵발전소 내 보관소 설치

- KEDO 탈퇴, 북한 경수로 지원 반대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전력 등에 대한 지속적 에너지 지원 / KEDO 반대 정책 채택
- 경수로 건설 지원 비용 지출 일체 중단.
- KEDO 이사국으로서의 지위 재검토.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전력 지원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소 건설 지원
(KEDO 해설) KEDO를 통한 북한에 대한 에너지 공급은 '인도주의적 차원',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은 북미간의 막후 협상의 결과물을 우리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KEDO를 통한 에너지 공급이 핵과 중유 등 반환정적 에너지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국민의 혈세로 북미간 협상 안에 뚜렷한 근거없이 지원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타당한 일이 될 수 없다. 이에 우리 당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에너지 공급 지원 약속과 KEDO 탈퇴-지원 중단 입장을 견고히 함으로써 남북문제에 있어 미국 등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자 한다.

- 수자원 정책 전면 재고

- 댐 건설 위주의 수자원 공급정책 전면 재고
- 중수도 확대 정책. 학교, 정부기관등 공공기관에 대한 중수도 설치 확대
- 수돗물 누수율 대폭 개선.
- 하천 직선화 반대, 방치된 하천에 대한 준설작업 진행.
- 재해예방 예산의 우선 배치 및 집행

- 전력민영화 전면 재검토

- 전력산업 민영화 전면 재검토

- 환경규제 강화 및 환경 파괴사업 재검토

- IMF 이후 완화된 환경규제에 대한 재검토
- 새만금/북한산 관통도로 등 환경파괴적 사업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

3) 도시·개발 문제에 대한 노력

- 난개발 및 무분별한 재건축 방지를 위한 노력

- 건교부 중심 개발 정책에서 환경부 중심 도시계획정책으로 전환
- 아파트 재건축 연한 연장 및 규제 강화

- 도시지역 녹지화 촉진

- 대규모 빌딩 옥상의 녹지화 추진
- 서울 등 대도시 지역 녹지축 확보 계획 수립

4) 국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협약 적극 대처
 -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국회비준 노력
 - 교토의정서 의무감축 참여

5) 생태주의적 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해설) 생태주의 교육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언급은 되고 있으나 현실에선 거의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환경교과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고, 이를 위한 교원 양성은 그 정책 방향성까지 의심 받을 정도이다. 청소년의 환경교육은 생태주의적 사회로 접근하기 위한 기초라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 생태 및 환경교육 내실화
 - 형식적인 환경교과 전면 개선. 필수 교과화 추진
 - 유아 및 초등교육에서 생태·환경교육 강화. 전문인 양성 및 인증제 도입.
 - 대도시·중소도시 등에 생태교육센터 건설

6) 국가의제, 시군구별 핵심 환경의제 선정 및 지역의제의 실질화

(해설) 리오 환경회의를 통해 채택되어 전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제21'은 계몽·홍보 운동 등 그 주제가 협소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직접적 반대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한계를 가져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의제21'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여러 주요 환경이슈들이 있을 때 '자문'이외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지속가능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형태로의 재편을 위해 해소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특별기구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 자문적 성격의 '지속가능위원회 폐지', 환경문제의 국가적 의제 선정과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생태사회 특별위원회 신설'
- 시군구별 핵심 환경문제 선정작업 착수. 중장기 과제로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들 간의 협의체 구성
- 계몽, 홍보 중심의 지역의제 사업 폐지. 실질적 문제 해결 기구로 재편.

7) 환경부 개편을 통한 환경문제의 실질적 해결 강화

(해설) 핵발전, 핵폐기물, 댐건설, 도로 건설 등 주요 환경핵심 이슈는 모두 환경부 소관이 아니다. 이는 주요 환경문제들이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 등 타 부서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원활하고 빈틈없는 건설, 풍부하고 끊임없는 자원공급, 산업 활성화, 과학기술의 진흥이라는 원칙에 의해 부서가 움직이는 조직의 생리상 어쩔 수 없이 많은 파피들이 벌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로 모든 권한이 이관된다고 환경파피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부서로의 업무 이관-업무 총괄권 등을 주는 것은 불필요한 환경파피를 막고, 한발 더 나아간 생태사회 건설에 기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산업자원부/과기부로 분산되어 있는 핵폐기물-안전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
- 도시개발-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서 환경부의 영향력 확대
-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고발/행정처분권 강화 및 신설